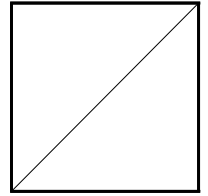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353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11. 29. (제 21 차)	

케이비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람.

제 출 자	위 원 장 김 주 현
제출 연월일	2023. 11. 29.

1. 의결주문

케이비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케이비증권(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하여 케이비증권(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관련 前·現 임원에 대하여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 정지 3월 상당) 또는 문책경고’ 조치를 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지배구조법」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1항, 제3항

「지배구조법」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제1항, <별표>

「지배구조법」 제43조(과태료) 제1항 제16호, 제4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제1항, 제4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항, 제2항, <별표2>

「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다. 관계부서 협의

- 2020년 제26차 제재심의위원회(2020.11.10.) 심의필
- 2023년 제21차 안전검토 소위원회(2023.11.23.) 심의필

<별지>

케이비증권(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케이비증권(주) : 과태료 50백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법적근거 :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제43조 제1항 제16호, 제4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 제34조 <별표2>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 임원에 대한 조치

- (前 대표이사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직무정지 3월 상당)

- (대표이사 ○○○) 문책경고

- 조치사유 :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법적근거 :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 제35조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2. 조치사유

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하여야 하고,
 - 내부통제기준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함에도,
 - 케이비증권은 금융상품 판매 및 TRS거래 등의 업무수행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내부통제기준을 합리적이고 기대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하게 마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참고) 케이비증권은 내부통제기준을 합리적이고 기대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하게 마련하지 아니하여 내부통제 소홀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의 건전한 운영 저해¹⁾, 다수 투자자 피해²⁾ 및 금융거래 질서 문란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음

1) 케이비증권은 ●●펀드 관련 TRS 평가손실(xxx억원) 등으로 'xx.x분기 당기 순손실 xxx억원 발생

2) 케이비증권이 판매한 '●● ★★★★★ 1.5Y 1~3호' 펀드 xxx억원(개인 xx건, 기관 xx건)은 전액손실 예상

[메가히트 상품으로 ○○ ★★★★★ 펀드 판매 추진 배경]

□ 케이비증권은 20xx.xx월경 지속적인 판매(Steady-Selling)가 가능하고, 수익률 제고 목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메가히트(Mega Hit) 상품을 개발하기로 하고, 〰〰〰〰〰〰에서 상품구조, 관련 리스크 및 법률 이슈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였음

- 20xx.xx월 ☆☆☆☆☆와 협의*를 통해 대체투자 블라인드 펀드인 ○○ 〰〰〰 〰〰 D-1호 펀드에 TRS 계약을 통해 투자하는 '○○ ★★★★★' 펀드를 매월 1~2회 판매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동 상품 판매를 '20xx년 주요 목표달성 전략' 및 '중점 판매상품' 등에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판매를 추진하였음

* 'xx.xx.xx. ☆☆☆☆☆와 케이비증권 〰〰〰〰〰(판매담당) 및 〰〰〰〰〰 3자 회의 진행

- 또한, 케이비증권은 메가히트(Mega Hit) 상품의 공급실적을 〰〰〰 〰〰〰, 〰〰〰〰〰〰〰〰 및 〰〰〰〰〰〰의 KPI에 높은 비중으로 반영(20xx.x월)함으로써, 〰〰〰〰〰〰 〰〰〰〰〰〰가 TRS를 제공하여 메가히트(Mega Hit) 상품의 판매를 적극 뒷받침 하도록 하였음

(1)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금융 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등을 내부 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도

- ① 케이비증권은 “△△△△△△△△(이하 '위원회') 운영규정”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 20xx.x.xx. 위원회에 ‘○○ ★★★★★ 1호’ 펀드만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 2호 및 3호 펀드는 당초 여러 회차의 출시·판매를 예정하고 있었고 유사한 리스크 구조를 가진 상품이었다는 이유로 위원회 심의·의결을 임의적으로 생략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 ‘○○ ★★★★★ 1호’ 펀드에 대한 위원회 가결 이후 기초자산의 부실 가능성 인식, TRS 증거금률 대폭 인상(xx%→xx%), 판매시점 연기(20xx.x.x.→20xx.x.xx.) 등 투자 리스크가 크게 높아졌음을 내부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20xx.x.xx. 설정되는 3호 펀드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생략한 사실이 있음

② 케이비증권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용되는 “△△△△△△△△△△ 운영규정”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리스크심사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 위원회 위원 13인 중 ■■■■■■ 담당 부서장 및 ▲▲▲▲▲▲▲▲ 담당 부서장 2인을 제외한 11인을 상품판매 및 영업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함에 따라 위원회에 안전으로 상정된 금융상품에 대해 실질적인 리스크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운영하였고,

-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규정하여, ■■■■■■ 담당 부서장 및 ▲▲▲▲▲▲▲▲ 담당 부서장이 반대의견을 표시하더라도 안전 부결이 불가능(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였음

- 이러한 운영방식은 20xx.x.xx. 위원회에 상정된 ‘○○ ★★★★★ 1호’ 펀드(레버리지 xxx%) 심사시 TRS 거래에 따른 레버리지 리스크 및 블라인드 펀드로 인한 투자대상 리스크 등을 충분히 심사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 ★★★★★ 1호’ 펀드의 투자대상인 ○○ ☼☼☼☼ D-1 펀드 부실로 인한 대규모 투자자 피해(전액손실)로 이어짐

(2) TRS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① 케이비증권은 TRS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편중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 20xx년말 기준 ■■■■■■■■■의 ☆☆☆☆☆와 거래비중은 전체 TRS 익스포저의 xx.x%(x.x조원 중 x.x조원), 기초자산이 펀드인 TRS의 경우 전체 TRS 익스포저의 xx.x%(x.x조원 중 x.x조)에 달하는 등 TRS 거래가 ☆☆☆☆☆에 과도하게 집중되었고,

- ■■■■■■■■는 TRS 익스포저 편중위험에 대한 ■■■■■■■를 실시하지 않다가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인지한 20xx.x.x. 이후에서야 '■■■■■■■■ TRS 관리방안'을 통해 자산운용사 및 TRS 기초자산(母펀드)에 대한 편중위험 관리를 시작하였음

② 케이비증권은 거래상대방 또는 기초자산이 펀드인 경우 임직원이 TRS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여,

- ■■■■■■■■는 TRS 거래상대방 및 기초자산으로 취득하는 펀드의 세부 자산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았고,

- ■■■■■■■■는 20xx.x.xx. TRS 기초자산에 펀드를 추가하면서 TRS 거래부서에게 펀드내 자산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만을 제시한 후 거래부서의 이행 여부는 관리하지 않았으며,

(3) TRS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마련의무 위반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6호, 「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2 제6호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함에도,

- ① 케이비증권은 내부 '■■■■■■■■■■'에서 TRS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시 적격담보 수취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담보수취 시점 및 담보 수취와 개별 기초자산 취득 간의 선·후순위 등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관련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가 ■■■■■■■■■■에 통보한 TRS 관리방안(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가 수행하는 TRS 거래의 증거금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 ■■■■■■■■■■는 20xx.x.xx.~20xx.x.xx. 기간 중 ♠♠♠♠5호 및 ♠♠♠♠17호 펀드와 TRS거래시 기초자산을 먼저 취득하고 증거금을 1~3일 후에 수취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고,
- 20xx.x.xx. △△데스크의 거래한도 x,xxx억원을 초과하여 '●● ★★ ★★ 3호' 펀드와 TRS거래를 하였으며,
- ■■■■■■■■■■는 증거금 사후 수취 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였고, TRS거래한도를 사후(20xx.x.xx.)에 증액한 후 거래일에 소급적용 하는 등 ■■■■■■■■■■ 업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② 케이비증권은 ‘♠♠♠♠♠♠ ♠♠♠♠♠♠’에서 TRS 거래시 평가금액, 청산가격 및 수수료 산정 등과 관련한 불건전 거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전·사후에 확인하는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 20xx.xx.x.~20xx.x.xx. 기간 중 ○○ ☸☸☸ ☸☸ D-1호 등 12개 펀드 및 ○○ 고유에 약정이익을 제공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기 위해 다른 펀드의 TRS 평가금액 및 청산가격 등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케이비증권이 기수취한 TRS 수수료를 반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관련법규 >

1.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제3항
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항
3. 「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별표2>

관계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해당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의 장은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별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34조 및 제35조 관련)

25.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10.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1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관리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허.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16호	5,000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한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
4.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별표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제11조 제1항 관련)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8. 금융회사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금융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2.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 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정책과	금융투자검사1국
연 락 처	02-2100-2892	02-3145-7040